

# 정부 조직개편 나선 여야, 첫날부터 여가부 폐지 놓고 대립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 열어  
여가부 존폐·이름 변경 등 대립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대두  
입장차만 확인, 다음주 다시 협의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에 관한 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3 정책협의체 킷오프(시합 시작 또는 재개를 뜻하는 축구 용어) 미팅을 개최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양당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마무리됐고, 다음 주 중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여야의 3+3 정책협의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와 일치에 관한 법률안 등을 논의해 올해 연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체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모두발언에서 비교적 양당 입장이 서로 어느 정도 표명됐다고 생각한다”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3+3 정책협의체 킷오프 미팅’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만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송연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교홍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뉴스시스

“회의에서는 특별한 사안은 없고, 앞서 발표한 여러 가지 방향에서 다음 주 중에 다시 일정을 잡아 협의하기로 했다. 더 이상 드릴 말은 없다”고 밝혔다.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부처 이름을 ‘성평등가족부’로 바꾼다거나 확대개편하는 등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논의가 안 됐다. 아마 다음 주부터 논의할 때 양당의 입장을 내놓고 절충을 시도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성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올라가 있는 여당의

정부조직법은 폐기라고 봐도 되나’는 질문에 “협의한 내용이 장차 정부조직법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여야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이견이 없지만,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화한 상태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좀 아쉬움이

있다”며 “5년 단임 대통령제 특성을 감안하면 대통령직인사위원회 때 정부조직법 현안을 만들어 정부 출범 초기에 해야 될 일인데, 임기 6개월이 지난 정부조직법 협의 자체가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를 폐지한다는데 여가부 장관이 임명되고, 장관이 폐지를 주도한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라며 “여가부와 관련해 저희 당이 밝힌 입장으로 여전히 해야 할 일 있다. 여전히 여성들 대한 구조적 차별이 있

고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현 상황이기에 때문에 여가부가 폐지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확대돼야 할 시기여서 이 부분 역시 국민의 힘과 지혜를 잘 모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은 여야가 표면적으로 법 취지에 대해 공감했으나, 표현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는데 국정철학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5년 동안 책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이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들께 알박기 인사, 국정 방해로 보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공공기관장들이 임명된 것을 알박기라고 표현되는데 알박기가 아니고 현 제도에 대해 법을 지켜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지금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알박기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尹, ‘성탄절 전후 특사’ 추진… MB 등 주목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등  
국민대통합 차원 정치인 포함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을 전후해 신년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 사면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일 대통령실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특별사면과 관련해 실무 검토에 들어가 검토안을 이달 중순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은 헌법 제7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특별사면은 사면법 제9조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자에 대해 특별사면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사면에서는 민생·경제에 중점을 두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과 조상수 전 민주노동당 총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들의 사면을 단행했다.

당시에도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의 사면이 언급됐으나 윤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을 대상에서 제외하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신년 사면에서는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정치인들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긍정적인 발언을 해왔다. 지난 6월에도 “전례에 비춰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36년 만기 출소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나이는 95세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대상자 포함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전 지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고, 2023년 5월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 내년 5월에 출소가 예정돼 있어 사면의 의미가 크지는 않지만,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김 전 지사의 복권까지 이뤄질 경우, 곧바로 정치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측근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친문재인데 적통으로 꼽히는 김 전 지사의 특별사면 및 복권이 이뤄질 경우, 정계 구도가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도 커 ‘야당 분열을 부추겼다’는 정치적인 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박정익 기자

##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 5일 韓-베트남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4~6  
일간 응우옌 쉰언 폭 베트남 국가주석  
이 국빈 방한한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폭 주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빈으로 올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방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폭 주석은 5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소인수회담, 정상회담, 국민만찬 등의 공식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폭 주석과 회담을 통해 정치·안보, 교역·투자·금융·인프라·공급망 등 경제 분야, 교육·인적교류,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관련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베트남은 우리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협력국”이라며 “폭 주석의 국빈 방한은 한-베트남 관계를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고,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폭 주석은 또한 5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을 만난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폭 주석은 방한에 맞춰 6일 서울 대한상의 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 주최로 열리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박정익 기자

## 국회 예산안 처리 오늘까지인데…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

여야, 본회의 개의 두고 평행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본회의 개의를 두고 날선 대치를 이어가면서, 내년도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2일)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박홍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실에서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본회의를 개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1일)의 사일정과 관련해 상정할 안건이 없고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의장에게 요구했다. 본회의를 열면 중요 현안과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도 안 되고 날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요청하고 나왔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내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라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정쟁적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면 과행될 수밖에 없고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 최대한 예산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드리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예결위 간사들에게 내일 오후 2시까지 최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서 협상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내일 보고 가능하면 법정기한 내 처리 가능한 것이고 아니면 비상적 상황으로(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들을 만나 “본회의 일정은 정기국회 시작하며 여야 지도부가 합의했고 의장도 공지한 사항”이라며 “그래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합의된 의사일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 1~2일 본회의를 잡아둔 것인데, 소위 59개 법안에 대해 본회의 올릴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 법사위에

서 국민의힘 간사가 심사 의결을 위한 회의를 잡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민생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기피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김 의장도 주 원내대표에게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후특위·인구특위·첨단산업전략특위 등 특위 구성안은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며 “국회 절차법에 의해 특위안을 상정할 수 있고 나아가 과거 본회의 안건 없이도 개의해서 보고 안건을 듣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던 적이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합의된대로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